

# 정부, ‘쿠팡 사태’ 신속 해결 위한 범부처 TF 가동

정보 유출 규모 재확인·수사과정 공유  
디지털 취약 계층 ‘회원 탈퇴’ 지원도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며 이같이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이뤄진다.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 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인 정보 유출 규모를 재확인한다. 또 쿠팡이 사고와 관련된 면책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아울러 2차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점검한다. 디지털 취약 계층의 쿠팡 탈퇴를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 입점 업체의 정보 유출 여부도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발표한 징벌적 손해배상, 과징금 가중 등의 제재 강화 방안은 물론 침해사고 직권 조사 도입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의 장의 계속되는 불출석 탓에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유관 상임위가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도 검토했지만, 준비에 한 달이 걸린다”며 “쿠팡 문제는 적시성이 필요한데 청문회를 하면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석 청문회에는 과방위와 함께 국토교통위, 정무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가 참여할 예정이다. 조아미 기자



“이번 역은 부산진, 해수부 역입니다” 18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진역에서 역명판 교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시로 이전하면서 부산진역 역명부기는 동구청에서 해양수산부·동구청으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 ‘주한미군 군무원’ 취업 노하우 공유

보훈부 제대군인지원센터 워크숍

국가보훈부 경기남부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18일 제대(예정)군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군무원’이란 새로운 틈새시장을 소개하는 특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주한미군 군무원은 군 복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의 강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직군이다. 하지만 채용 정보나 준비 방법 등이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 그동안 접근이 쉽지 않았다.

센터는 주한미군 군무원의 근무여건, 채용절차, 직무 특성을 소개하고 차별화된 지원 전략을 제공했다. 특히 현재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문종빈 씨를 멘토로 초청, 실제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채용 과정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요소, 영어 인터뷰 대응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맹수열 기자

## 보호구역 미리 확인하세요

경찰청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개시  
어린이·노인·장애인 시설 정보 안내

경찰청이 18일 오후 3시부터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www.safetyzone.go.kr) 서비스를 개시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국에 2만여 곳 지정된 보호구역은 그동안 지자체가 수기로 관리해 일반 국민은 보호구역의 위치나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이 없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학부모 등 국민이 보호구역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자지도 기반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방호울타리, 무인단속 장비 등 보호구역 주변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나 시설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도 전달할 수 있게 돼 교통안전 확보도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시설 등에 대한 통계 관리와 실태조사 결과 등록 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시스템 구축으로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사고 예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일사량·풍속 정보 제공,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능해진다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가능하도록 기상청이 내년 9월부터 일사량과 풍속 예측 정보를 제공한다. 또 국외 지진 조기경보 영역을 확대한다.

기상청은 이러한 내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내년 9월부터 일사와 바람 예측 정보를 ‘향후 3시간까지는 10분 단위, 이틀까지는 1시간 단위’로 재생에너지 플랫폼(energy.kma.go.kr)과 홈페이지로 제공한다.

특히 ‘○○ 지역에 오늘 구름이 지나가

일사량이 어제보다 5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이 예측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보도 제공한다.

기상청은 특정 지역에 최근 1년간 고도 별로 바람이 얼마나 불었는지 나타내는 ‘재현바람장’을 내년 1월부터 제공하고 재현 기간을 확대한 ‘풍력자원지도’를 12월까지 개발한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발전량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상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내년 11월까지 일본 난카이 해곡(경도 136도 부근)까지 포함하게 국외 지진 조기 경보 영역을 확대하고 국외 지진 위치 분석 정확도도 개선한다.

국외 지진 조기 경보는 대상 영역에서 규모 5 이상 지진이 발생해 국내에 진도 4 이상 흔들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표된다.

구조물별 체감 진동을 분석한 진도 등급 기준을 내년 6월까지 마련하고 국외 지진으로 국내 고층 건물이 흔들리는 상황에 대비해 ‘장주기 지진동’ 관련 기술도 개발한다.

기상청, 내년 9월부터 예보 확대  
진도 4 이상 영향 국외 지진 경보

특히 기상청은 기후재난에 대비, ‘폭염 중대 경보’와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도입하고 ‘열대야주의보’를 신설한다.

이 외에도 기상특보와 관련해 기상청은 내년 6월부터 수도권부터 호우특보가 언제 해제될지 3~6시간 전 알 수 있도록 예고제를 도입하고 특보 구역을 수도권과 세종을 중심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또 폭염·호우·대설·강풍·한파 등 위험 기상 발생 확률을 4단계로 나눠 2~3일 전 안내하는 ‘위험 기상 확률 정보’도 내년 6월부터 제공한다. 연합뉴스